

충남리포트 제85호 2013. 09. 16

## 도 및 시·군 풍수해종합계획과 도시계획부문에서의 역할

윤정미(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, coco@cdi.re.kr)

### 목 차

#### < 요약 >

1. 서론
2.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개념 및 범위
3.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 사항
4. 도와 시·군 풍수해종합계획의 차이점
5. 풍수해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부문의 역할



## 〈요 약〉

- 2005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하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태풍, 홍수, 강우, 풍랑, 해일, 조수, 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임
- 본 계획의 효과 증대를 위해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계획과 접목이 필수적이기에 2012년 1월 도시계획 반영 의무화를 위한 국토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
- 또한 2012년 8월 기초단위와 광역단위 계획 수립 시 동일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”을 제정하였으며, “시·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” 세부수립기준 개정시 도시계획과의 연계·강화를 위한 조사 방법을 보완하였음
- 그러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부서와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계획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나, 현재 도시계획부서와의 연계 및 역할이 불분명한 실정임
- 이에 본고에서는 시·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도차원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부문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시하였음
- 첫째, 시·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
  - 도 풍수해종합계획 수립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·군 종합계획의 협의·조정

- 광역차원에서의 조정·보완, 조사 범위(2개 이상의 시·군과 연계된 지구, 수계, 유역 등이 연계된 지역 등)
-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광역차원의 즉효성(사업 시행과 동시에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)과 파급성(유역 및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) 평가항목 추가
- 둘째, 도차원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도시계획분야에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
  -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기초분석 및 향후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분석되었는지 검토
  - 풍수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저감대책(안)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검토
  - 저감대책 계획과 도시계획과의 목표와 방향, 시기 등에 대한 일관성 여부 검토
  - 도시계획 업무 추진 시 풍수해위험지구에 대한 반영 필요
  -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 등의 심의 시 방재분야의 전문가 포함
  -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시스템에 풍수해위험지구 및 관리지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노력
  - 계획 결과를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

## 1. 서론

-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태풍, 홍수, 강우, 풍랑, 해일, 조수, 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2005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하고 있음
- 본 계획의 효과 증대를 위해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계획과 접목이 필수적이기에 2012년 1월 도시계획 반영 의무화를 위한 국토법 시행령 개정하였음
- 2012년 8월 기초단위와 광역단위 계획 수립 시 동일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”을 제정하였으며, “시·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” 세부수립기준 개정 시 도시계획과의 연계·강화를 위한 조사 방법을 보완하였음
  - 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”은 광역차원에서 2개 이상 시·군과 연계된 지역에 대한 조정, 여건변화 보완,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·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
- 그러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부서와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계획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나, 현재 도시계획부서와의 연계 및 역할이 불분명한 실정임
- 이에 본고에서는 시·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, 도차원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분야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

## 2.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개념 및 범위

### 1) 계획의 개념

- “풍수해”란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조수,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
- “풍수해저감종합계획”은 지역별로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각 지자체장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임
- “풍수해저감종합계획”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·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·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임

### 2) 풍수해종합계획의 적용 범위

#### ※ 법적근거

- 제16조(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)
- 시장·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5년마다 시·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
- 시·도지사는 시·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·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(자연재해대책법(법률 제11141호, 2011.12.31), 시행 2012.9.1)

#### ※ 목적

-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조수 등 풍수해로 부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
- 풍수해특성, 피해발생원인, 재해위험도 분석, 저감대책 및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적 지역단위 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
-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함

#### ※ 범위

- 시간적 범위 : 5년 주기(—목표년도 10년)
- 풍수해 범위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조수 등(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3호에 규정)

## (1) 시·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범위

### ○ 수립대상

-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계획 :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

※ 단, 군 단위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광역시의 경우 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「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」을 준용

- 시·군 계획 : 시·군

### ○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조수, 대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## (2)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범위

### ○ 수립대상 : 도(특별자치도 제외)

### ○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조수, 대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### ○ 기본방향

- 도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·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광역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광역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·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통해 관련 시·군 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

- ① 2개 이상 시·군과 연계된 지구, 수계, 유역 및 해안지역, 하천 상·하류로 연계된 지역으로 광역차원의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
- ② 기상여건 변화 및 개발사업 시행, 재해위험요인 해소 등 풍수해 여건 변화로 광역차원에서 시·군 종합계획의 검토·조정이 필요한 경우
- ③ 시·군 종합계획의 수립년도를 기준으로 이미 수립된 시·군 종합계획의 기초현황 자료를 추가·보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

※ 광역차원 조정 및 보완지역

- 풍수해 위험요인의 공간적 범위가 2개 이상의 시·군에 분포한 경우
- 피해원인 제공지역과 피해발생지역이 각각 다른 시·군에 위치한 경우
- 2개 이상의 시·군이 상호 연계되어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
- 개별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을 광역적으로 통합 시행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경우

### 3.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 사항

- 재해복구개념에서 예방위주의 방재형 국토체질 강화를 위해 2005년 7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도 도입
- 2012년 1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반영을 의무화하기 위해 국토법 시행령 개정
- 2012년 8월 기초단위와 광역단위 계획 수립 시 동일한 세부수립기준이 적용된 한계 극복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해 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”을 제·개정하였음
- 개정된 시·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은 도시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초조사의 구체적 방법 제시
- 새롭게 제정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2개 이상 시·군과 연계된 지역에 대한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 조정, 풍수해 여건변화로 인한 시·군 계획 변경·보완, 시·군별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
- 시·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도시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초조사 방법 구체화(제2장), 도시계획 적용이 용이하도록 공간적



영향범위 설정 구체화(제3장)하였음

-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광역차원에서 시·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검토(제2장), 광역차원의 기초조사 방법, 현장조사 및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위험지구 선정, 저감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, 풍수해 위험지구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·운영,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규정함

## ※ 참고

● 시·도, 시·군별 종합계획 수립현황 : 총 32건 승인 [소방방재청, 2012.11.30 현재]

- 시도 : 대상 17개 시도중 수립중 5개(서울,부산,대구,대전,제주), 미발주 12개 지자체
- 시군 : 대상 158개 시군중 승인 32개, 진행중 51개, 용역중 73개 미발주 2개 지자체

### 〈시도, 시군별 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〉

구 분	개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세종
대상 시·도	17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
용역 중	5	1	1	1	-	-	1	-	-	-	-	-	-	-	-	-	1	-
대상 시·군	158	0	1	1	2	0	0	1	31	18	12	15	14	22	23	18	0	0
수립 현황	승인	32	-	-	-	-	-	-	10	5	7	5	1	-	1	3	-	-
	진행중	51	-	-	-	-	-	1	10	9	5	7	6	1	7	5	-	-
용역 중	73	-	1	1	-	-	-	-	11	4	-	3	7	21	15	10	-	-
미 발주	2	-	-	-	2	-	-	-	-	-	-	-	-	-	-	-	-	-

#### 승인 지자체 (32개)

경기/ 성남시, 부천시, 광주시, 평택시, 파주시, 안양시, 오산시, 남양주, 용인시, 광명시/ 강원/ 정선군, 영월군, 원주시, 평창군, 홍천군/ 충북/ 충주군, 괴산군, 청주시, 진천군, 보은군, 단양군, 청원군/ 충남/ 천안시, 보령시, 계룡시, 공주시, 아산시/ 전북/ 정수군/ 경북/ 영양군/ 경남/ 남해군, 의령군, 거창군

자료 : 김주성, 2012,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소개 및 품셈개발방안, 소방방재청 워크숍 발표자료

## 4. 도와 시·군 풍수해종합계획의 차이점

### 1) 수립대상 및 범위의 차이

- “시·군 등 풍수해종합계획”은 수립지역이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 단위 행정구역이며, “도 풍수해종합계획”은 도 단위 행정구역임

### 2) 협의체(도 풍수해종합계획)의 유무

- 도 풍수해종합계획 수립 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함
- 협의체는 시·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조정 및 선정, 광역차원의 최종적인 투자우선순위 결정, 시행계획의 합리적인 협의·조정의 역할 담당
- 해당 도, 시·군의 방재담당 공무원과 방재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

### 3) 도 종합계획은 시·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광역차원에서의 조정·보완 기능 수행

- 도 종합계획은 시·군종합계획에 대한 광역차원에서의 조정 및 보완을 통해 도차원의 풍수해위험지구 및 저감대책에 대한 투자의 실질적인 실행방안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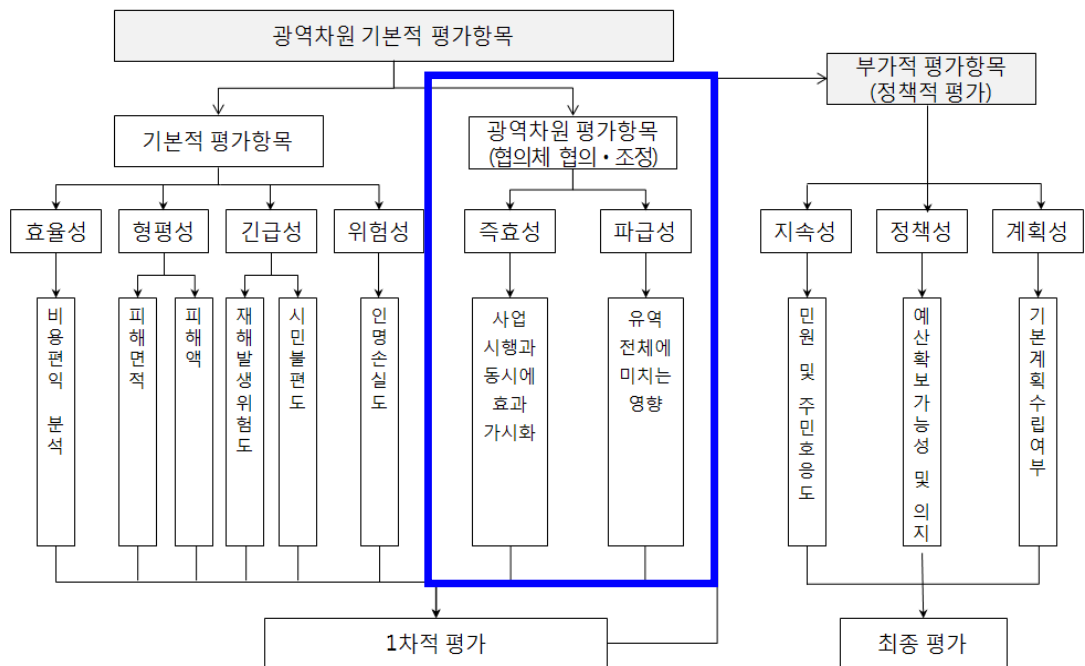
### 4) 계획 범위의 차이

- 도 전역에 대한 풍수해 발생특성 및 위험요인 분석을 통하여 풍수해 유형별 공간적인 동질성 지역 구분
- 풍수해저감 목표와 시행방안 및 풍수해 유형별 공간적인 동질성 지역 구분 결과에 기초하여 시·군 종합계획의 저감대책과 위험지구에 대한 광역차원의 조정 및 보완

- 인접 또는 동일 수계 내 타 시·도와 연계하여 전 지역 또는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 검토 및 제시
- 시·군 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조정을 위한 기준 제시 및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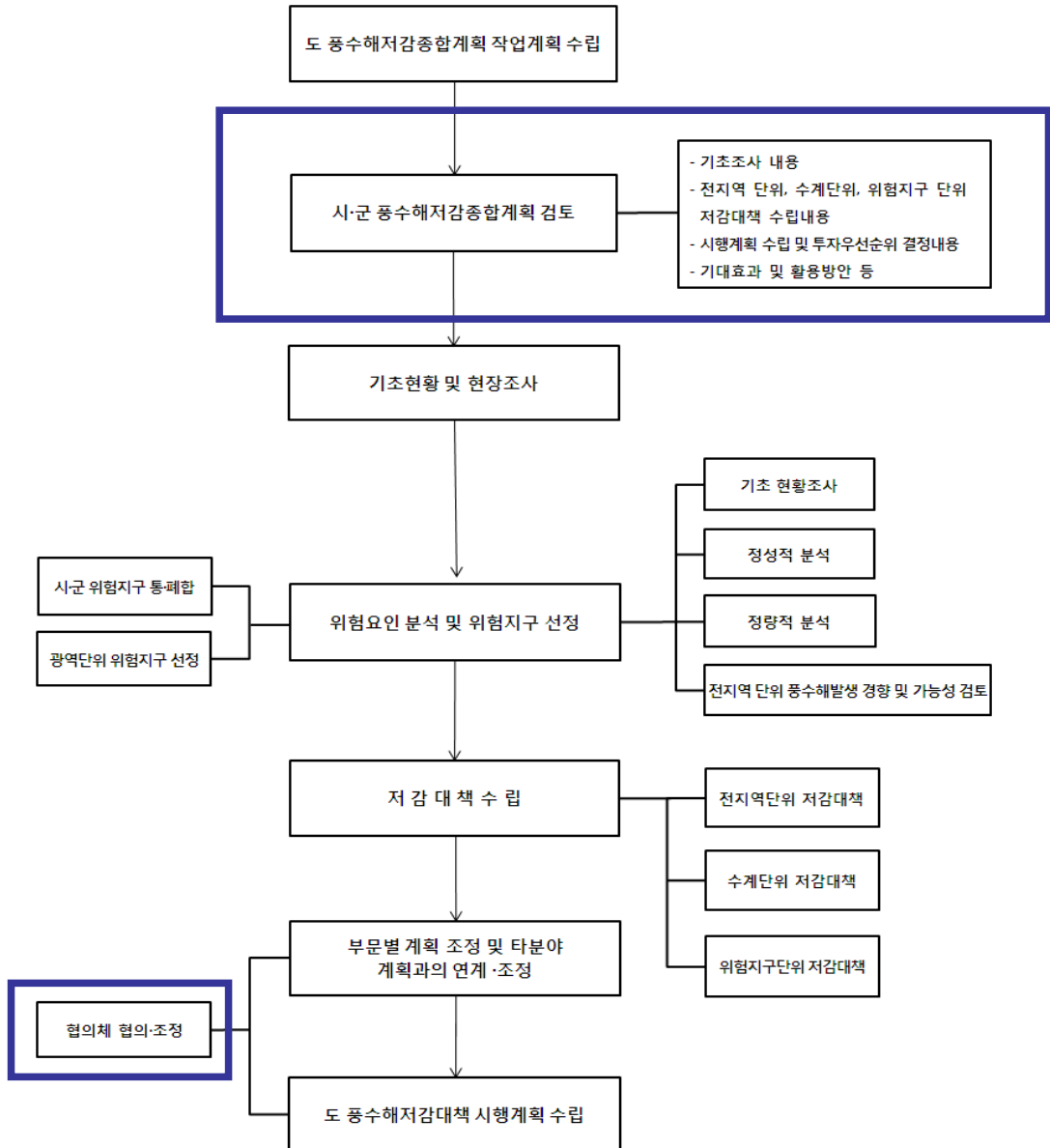
## 5)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차이

- 광역차원 평가항목에서 즉효성과 파급성 부분을 추가하였음
  - “시·군 등 풍수해종합계획”과 평가항목의 차이점은 “광역차원 평가항목”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며, 이는 협의체의 협의·조정을 통해 수행될 수 있음
  - 즉효성은 사업 시행과 동시에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
  - 파급성은 유역 및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



## 6) 계획 수립 작성 흐름

-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” 수립은 “시·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” 검토를 바탕으로 수행되며, 추가 조사 및 분석 또한 협의체를 통해 계획이 수립되어짐



## 5. 풍수해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부문의 역할

첫째,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지역적, 인문·사회적 요인 등 기초분석 및 향후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이 정확히 포함되어 분석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함

- 지역적 특성(강수량, 표고 등)과 인문·사회적 요인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을 기초분석이 체계적으로 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함
- 풍수해위험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향후 10년 내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개발계획 및 정비사업 등에 관한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분석되었는지 검토
  - 토지이용특성이 정확히 분석되었는지 검토

둘째,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저감대책(안)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검토

- 저감대책이 수립된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현재 결정된 도시기본계획, 도시관리계획, 도시개발사업 등 관련 도시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의 조정, 개발사업의 변경, 행위허가제한, 비용부담 등의 저감대책이 적절한지 검토

- 기개발지역 : 이주대책 및 대체토지 마련, 방재지구 지정 및 정비/규제(지자체 조례), 일반 정비사업(도시재정비, 주택재개발, 주택재건축, 주거환경정비, 도시환경정비 등), 개별 건축규제<대지(예:지반고 승고), 건축용도(예:지하층 거실 용도 불허), 구조(예:필로티, 풍수해에 안전한 구조/재료), 설비 등>
- 기개발지역 이외의 미개발/저개발지역 : 신규개발 억제, 신규개발 허용하되, 풍수해 저감대책 조건부 허용,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상 시가화 예정 용지에서 제외하고 보전용지로 배분,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상

보전용도지역 지정, 보전녹지, 보전관리, 자연환경보전 등, 개별 건축규제<대지(예:지반고 승고), 건축용도(예: 지하층 건실용도 불허), 구조(예: 필로티, 풍수해에 안전한 구조/재료), 설비 등>, 토지매입

셋째, 저감대책 계획과 도시계획과의 목표, 방향, 시기 등에 대한 일관성 여부 검토

넷째, 개발행위 등 도시계획 업무 추진 시 풍수해위험지구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

- 풍수해위험 지구는 도시계획상 개발용도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거나, 개발예정지구 지정시 해당지역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알려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
  - 향후 풍수해위험지구이면서 개발이 확산되지 않은 지역은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며
  - 재해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억제 정책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

다섯째,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 위원회 및 공간계획 심의 회의 시 방재분야의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

- 모든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 계획 시 풍수해위험지구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

여섯째,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시스템에 풍수해위험지구 및 관리지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노력 필요

- 국가차원의 행정공간정보시스템 및 지자체의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등에 풍수해위험지구 및 관리지구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향후 개발계획 승인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함

마지막으로 계획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

## ◆ 참 고 자 료 ◆

소방방재청, 2012, 시·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개정안

소방방재청, 2012,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제정안

소방방재청,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제·개정 고시, 2012.8.23 보도자료

정주철, 2012, 현행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오류와 쟁점, 소방방재청 워크숍 발표자료

김원석, 2012,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주요 검토의견 및 반영사례, 소방방재청 워크숍 발표자료

김주성, 2012,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소개 및 품셈개발방안, 소방방재청 워크숍 발표자료

**윤 정 미** coco@cdi.re.kr

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

Tel. 041-840-1203

\* 본 내용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과 소방방재청 2012년 “지역안전도 진단 등 자연재해 사전예방업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Workshop -풍수해저감종합계획-”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.

## 충남리포트 발간리스트

구분	제 목	집필자	발행일
2008-01	허베이 스피리트(Hebei Spirit)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	송두범	2008. 1.21
2008-02	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	강영주	2008. 2.22
2008-03	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	이충훈 · 권영현	2008. 3.19
2008-04	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	조봉운 · 송두범	2008. 5. 2
2008-05	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」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	송두범 · 강영주	2008. 5.27
2008-06	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	이관률	2008. 6.19
2008-07	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	신동호 · 강영주	2008. 7.30
2008-08	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	백운성	2008. 8.29
2008-09	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·군별 균형발전 평가	원종문 · 강영주	2008. 9.30
2008-10	「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」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	백운성	2008.10.30
2008-11	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	오용준	2008.11.28
2008-12	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	정옥식	2008.12.30
2009-01	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	강영주	2009. 1.30
2009-02	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	한상욱	2009. 2.24
2009-03	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	정종관	2009. 3.11
2009-04	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	전승수 · 한상욱	2009. 3.18
2009-05	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	오석민 · 한상욱	2009. 4.24
2009-06	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	이인배	2009. 5. 8
2009-07	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	임준홍	2009. 6.29
2009-08	태안군 녹색성장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	이인배	2009. 7.23
2009-09	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	최인호	2009. 8. 6
2009-10	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	윤병선 · 유학열	2009. 9. 7
2009-11	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	임준홍 · 이상준외	2009. 9.30
2009-12	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	조한석 · 백운성	2009.10.30
2009-13	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	임형빈 · 유학열	2009.11. 9
2009-14	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!	김용웅	2009.11.18
2009-15	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	이재완 · 이관률	2009.12.11
2009-16	대전 · 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	류덕위 · 김양중	2009.12.31
2010-01	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	임준홍 · 조수희외	2010. 1.29
2010-02	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	김동준 · 김양중	2010. 2.24
2010-03	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-사회계정행렬(SAM)을 통한 분석	임재영	2010. 3.10
2010-04	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	이용재 · 임준홍	2010. 3.18
2010-05	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	이충훈 · 권영현	2010. 4. 5
2010-06	아 · 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	최병학	2010. 4.30
2010-07	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	김양중	2010. 5.10
2010-08	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	송두범	2010. 5.27
2010-09	대전 · 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	김동준 · 김양중	2010. 6. 3
2010-10	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	장동호 · 윤정미	2010. 6.21
2010-11	충남 귀농 · 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	유학열	2010. 8. 9
2010-12	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	신동호	2010. 8.16



구분	제 목	집필자	발행일
2010-13	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(1998년-2007년)	임재영	2010. 8.19
2010-14	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	이인희	2010.10. 6
2010-15	사람중심,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	조명래 · 임준홍외	2010.10.29
2010-16	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	임준홍 · 김양중외	2010.11.09
2010-17	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	임형빈	2010.11.16
2010-18	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	오용준	2010.12.30
2011-01	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·군의 대응방안	한상욱	2011.01.13
2011-02	2011년 충남의 GRDP 전망	김양중 · 이선희	2011.02.10
2011-03	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	이충훈	2011.03.31
2011-04	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	사공정희	2011.04.21
2011-05	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	임준홍 외3명	2011.05.02
2011-06	수질오염총량관리제!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	이상진 · 김영일	2011.06.23
2011-07	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	성태규외	2011.06.30
2011-08	충남 향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	임형빈	2011.07.11
2011-09	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	정욱식	2011.07.27
2011-10	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	성태규	2011.08.22
2011-11	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·협력 방안 연구	김양중	2011.10.31
2011-12	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지정책의 개선방안	홍성효	2011.11.30
2011-13	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	이인희	2011.12.29
2012-01	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	김종수	2012.01.31
2012-02	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	신동호	2012.02.13
2012-03	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	김양중	2012.02.28
2012-04	2012년 충남 GRDP 전망	김양중	2012.02.28
2012-05	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	임형빈	2012.03.12
2012-06	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	송두범 · 김종수	2012.04.02
2012-07	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	김영일	2012.05.31
2012-08	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분석	조영재	2012.06.21
2012-09	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	전영노 · 백운성외	2012.08.10
2012-10	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	허남혁 · 정준	2012.08.16
2012-11	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	윤정미	2012.09.20
2012-12	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	정욱식	2012.10.31
2012-13	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통한 도심녹지체계 확보	사공정희	2012.11.28
2012-14	한·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	김양중	2012.12.12
2013-01	충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특성분석과 정책수요 도출	홍성효 외	2013.02.21
2013-02	2013년 충남 수출 및 GRDP 전망	김양중	2013.03.07
2013-03	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과제	송두범 외	2013.04.19
2013-04	에코유지업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 방안	여형범	2013.04.29
2013-05	충남지역 귀농·귀촌 실태 비교 연구	유학열	2013.05.10
2013-06	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	강마아 · 여민수	2013.07.10
2013-07	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	허남혁 외2명	2013.07.18
2013-08	대형마트 의무휴업, 그 후 1년; 일본 상점가정책의 시사점	이민정	2013.08.09
2013-09	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	이관률	2013.08.23
2013-10	충남의 2040 미래전망 및 시사점 -지역경제분야-	김양중	2013.09.02

■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([www.cdi.re.kr](http://www.cdi.re.kr))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,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!